



#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

심성은

- 01 I. 들어가며
- 02 II.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관련 논의 현황
- 05 III. 유럽의 모병제와 징병제 전환 사례
- 21 IV. 시사점
- 23 V. 나가며

### 요약

#### □ 최근 우리나라에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내적 배경으로는 병역자원 감소,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 축소, 안보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음. 반면, 한반도 및 국제 안보의 갈등 고조 등으로 징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어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 유럽의 경우 1990년대에는 모병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0년대 들어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1990년 들어 냉전 종식, 해외 파병 증가, 첨단 무기 도입, 군 복무 기간 단축, 징병제 인식 악화 등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모병제로 전환했음
- 반면 2010년대 들어 러시아와 인접국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한 안보 상황 악화, 모병제를 통한 병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징병제를 재도입했음
- 최근 독일, 프랑스 등은 각각 안보 위기 고조와 젊은이들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임

#### □ 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방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검토, 정부와 군, 시민 등의 폭넓은 합의 도출, 병력 충원과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논의·대처할 필요가 있음





##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제1항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병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축소, 첨단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 감소, 남북한 관계 개선 시도와 같은 안보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한반도 긴장 지속, 국제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징병제나 모병제와 같은 병역제도는 각 국가의 안보 상황, 국방전략, 병력자원 가용성, 정치·사회 체제, 과학기술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징병제와 모병제는 장단점이 분명해 각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도 명확히 구분된다. 징병제의 경우 일정 규모의 상비군 유지, 일체감 형성과 안보 의식 고취, 적은 비용으로 병력 획득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모병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전문성 제고, 국민의 병역부담 감소 및 자발성 극대화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할 경우 종합적이며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모병제를 도입했거나 징병제를 재도입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 연구는 우리나라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된 대내외 상황과 조건, 어려움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자 서유럽 국가부터 모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벨기에는 EU 회원국 중 최초로 1995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현대적인 징병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도 2001년에 모병제로 전환했다.<sup>1)</sup> 독일도 냉전 종식과 2000년대 군 복무 회피자 증가 등으로 인해 2011년 모병제를 도입했다. 그 외에도 2000년대에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키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법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징병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으나, 독일과

1) 문병기, 『프랑스 안보정책의 특성과 변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네덜란드처럼 징집을 중단했을 뿐 법적으로는 아직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sup>2)</sup>

특기할 만한 점은 2010년대 들어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리투아니아가 2015년에 징병제로 다시 전환했다. 북유럽에서는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스웨덴이 2018년에, 라트비아는 2023년에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그 외에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인 국가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대선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18-21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개월의 군사 훈련을 제안해 ‘보편적 군 복무(Service national universel, 이하 SNU)’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2년 하원에서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유럽의 1990년대 이후 모병제 도입과 2010년대 징병제 재도입 흐름은 대외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도입과 해외 파병 등으로 인한 소규모 정예 병력 양성 필요 여부, 징병제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대내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1990년대-2000년대의 유럽의 모병제 도입과 2010년대 징병제 재도입의 대내외 배경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일견하고(II), 1990년대와 2000년대 유럽 국가들의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이유와 배경,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징병제를 재도입했거나 논의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뒤(III),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

## II.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관련 논의 현황

최근 우리나라에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대내적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력과 국방 예산의 증가,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무기 개발, 모병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구 감소로 인한 대규모 병력 유지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개선의 경험, 소규모 정예 병력의 해외 파병 증가 등으로 인한 모병제 필요성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 1. 정치권

우리나라의 모병제 논의는 2000년대 들어 정치권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을 통해 남북 간의 과도한 군사

2) CIA, Military service age and obligation(검색일: 2022.10.26.),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military-service-age-and-obligation/>>.

력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3)</sup> 2007년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도 모병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남북한 관계가 개선된다면 모병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남북한이 군축을 하게 된다면 장기간에 걸쳐 전문 기술이 필요하거나 첨단 분야부터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sup>4)</sup>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할 경우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모병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sup>5)</sup> 그 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도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명확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sup>6)</sup>

2010년대 들어 대규모 병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징병제의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김두관 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인구 감소로 인해 대규모 병력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징병제의 사회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밝혔다.<sup>7)</sup> 후보별로 입장 차이도 있었다. 2017년 남경필 전 바른정당 경선 후보는 대규모 병력 유지가 어려워졌으므로 전면적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sup>8)</su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병력 규모 감축을 위해 “30만중 10만 명을 전투 프로와 무기장비 전문가로 보수를 주는 모병으로 전환”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안했다.<sup>9)</sup>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sup>10)</sup> 반면, 유승민 전 바른정당 후보는 “전방은 가난 때문에 군에 오는 젊은이가 갈 것”이라며 모병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sup>11)</sup>

2022년 대선 때에도 인구 감소 대처와 군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역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약이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군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징모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sup>12)</sup>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강군과 군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sup>13)</sup> 심상정 후보는 징병제로 인한 젊은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sup>14)</sup>

요컨대 정치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제도의 개편, 군의 전문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

3) 「세상 바꾸려 대통령 후보 나섰다. '20억 기탁금' 목숨 걸고 싸울터」, 『OhmyNews』, 2002.9.9.

4) 「이명박 “모병제 도입 검토할 필요”」, 『동아일보』, 2007.9.13.

5) “정동영 “평화프로세스 작동시 모병제 가능”」, SBS, 2007.11.20.

6) “권영길 후보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SBS, 2007.10.1.

7) 「김두관 “모병제 도입해 군인 절반 감축”」, 『한겨레』, 2012.8.19.

8) 박병수, 이경미, 엄지원, 이세영, 「문재인부터 남경필까지…한 눈에 쏙 들어오는 ‘군·병역 공약’」, 『한겨레』, 2017.1.25.

9)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최종 검색일: 2021.3.16.) <<https://ja-jp.facebook.com/jaemyunglee1/posts/1363112260397524/>>.

10)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정책공약집, 2017.4.15.; 정의당,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국방공약 발표 기자회견, 2017.3.27.

11) “유승민 “모병제, 빈곤 청년만 군대 가게 될 것”」, 연합뉴스, 2017.2.22.

12) 김동현, “尹 “징병 모병 혼합제”…沈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연합뉴스, 2022.2.25.

13) 조윤영,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징집병 15만명으로 축소”」, 『한겨레』, 2021.12.24.

14) 홍인택, 「초봉 300만원 모병제 꺼낸 심상정 “남녀, 피부색, 성적지향 차별 없다”」, 『한국일보』, 2021.11.15.

을 위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어 왔으며, 도입 시기나 규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sup>15)</sup>

## 2. 학계

학계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모병제 찬성파의 가장 주된 근거는 모병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의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sup> 즉 모병제를 도입해 병력 구조를 전문성을 갖춘 장기 복무 병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모병제 운용 비용이 징병제에 비해 적을 수도 있으며,<sup>17)</sup> 모병제를 통해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접근도 있었다.<sup>18)</sup> 더불어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경제력 개선, 국방 예산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예비군 전력 운용, 모병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모병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19)</sup> 다만 급격한 병역제도 개편을 통해 모병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0)</sup>

반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즉,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 도입 대신 첨단 무기 도입과 부사관 제도의 질적·양적 개선을 통해 징병제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22)</sup> 또 첨단무기 등 기술력으로 병력 수요가 줄더라도 국방에서는 병사의 수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sup>23)</sup>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sup>24)</sup> 그 외에도 절충안으로 징모혼합제나 숙련된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인력 위주의 병력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sup>25)</sup>

15) 이학수, “징병과 모병 사이···병역 개편’ 공약 살펴보니”, MBC, 2022.2.18.

16) 이해리, “[소통광장-병역제도]④ 진호영 “모병제 지금부터 추진해야 10년 후 정착”, 『뉴스포스트』, 2021.7.6.

17)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경제적”, 『세계일보』, 2005.7.5.

18) 김대일,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경제학연구』, 제68권 제3호, 2020, pp. 139-179.

19) 김민호,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연구 -대안 모병제 전환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권 제1호, 2021, pp. 883-898.

20) 최창현, 이광석, 전상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분석: 정책논변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4권 제1호, 2015, pp. 93-123; 이응민,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정책브리핑』, 2019.11.7.

21) 정혜인,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 제63권 제4호, 2014, pp. 78-110.; 박휘락, “[박휘락의 안보백신] 선(先) 복핵대응 후(後) 모병제 제안하라”, 『데일리안』, 2021.4.27.; 이종윤, “‘모병제 도입’ 긍정적인 이재명-홍준표.. 전문가들은 “월급 줄 예산부터 따져봐야” [이슈 진단]”, 『파이낸셜뉴스』, 2021.11.3.

22) 박휘락, 앞의 글.; 이종윤, 앞의 글.

23) 위의 글.

24) 양성모, ““인구감소..모병제 피할 수 없어” vs “충원 불가..병력 구조 개편부터””, KBS, 2021.6.7.

25) 『세계일보』, 2005.7.5. 앞의 글; 홍규빈, “병역제도 개편방향 시민사회안’ 발표···“군병력은 30만명으로 감축””, 연합뉴스, 2021.11.10.; 박

### 3. 시민단체와 여론

시민단체는 대체로 모병제 도입에 호의적인 편이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sup>26)</sup> 2020년에 설립된 소규모 시민단체인 ‘모병제추진시민연대’<sup>27)</sup> 모병제 도입에 호의적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중에서도 군 인권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군인권센터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제를 지지하는 등 모병제 도입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다.<sup>28)</sup>

여론 역시 모병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그 차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 9월, 한국갤럽이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징병제 찬성 48%, 모병제 찬성 35%로 징병제 유지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았다.<sup>29)</sup>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2021년 5월, 성인 1,003명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징병제 유지는 42%, 모병제 도입 찬성이 43%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sup>30)</sup>

## Ⅲ. 유럽의 모병제와 징병제 전환 사례

### 1. 유럽의 모병제 전환 사례

#### 가. 개괄

1990년 들어 유럽 국가들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7개 EU 회원국 중에서는 1995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1997년 네덜란드, 2001년 프랑스, 2002년 스페인, 2003년 슬로베니아, 2004년 포르투갈, 2005년 이탈리아, 체키아, 헝가리, 2006년 슬로바키아, 2007년 루마니아, 라트비아, 2008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2009년 폴란드, 2010년 스웨덴, 2011년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모병제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로는 냉전 종식을 들 수 있

진수,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쟁점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5권 제3호, 2022, pp. 237-270.

26)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2022.12.22.), <<https://nomoredraft.tumblr.com/>>.

27) 모병제추진시민연대(검색일: 2022.12.22.), <<https://antidraft.wixsite.com/main>>.

28) 홍규빈, “군인권센터 “징병-모병 혼합하고 여성 지원도 받아야””, 연합뉴스, 2021.11.10.

29) Gallup, 데일리 오피니언 제229호(2016년 9월 5주) - 군 생활과 모병제, 개천절과 단군 (9월 통합)(검색일: 2022.11.28.),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80>>.

30) Gallup, 데일리 오피니언 제449호(2021년 5월 4주) - 경제 전망, 군대 관련 인식, 모병제-여성 징집 등 병역제도 (5월 통합 포함)(검색일: 2022.11.28.),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13>>.

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면서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 파병이 빈번해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NATO와 EU에 가입하면서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은 군비 경쟁과 대규모 병력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서유럽 국가들이 모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동유럽 국가들도 차례로 모병제로 전환했다.

대내적으로는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부와 군 당국의 모병제 도입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병제 도입을 주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을 경우 제도 개편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또 모병제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 형성도 모병제의 전제 조건 중 하나였으며,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모병제로 전환하는 비용에 대한 사전 대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모병제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1 | 냉전 종식 후 주요 유럽 국가들의 모병제 전환 배경<sup>31)</sup>

년도	국가	배경
2001	프랑스	대외적 배경: 냉전 종식, 해외 파병 증가 대내적 배경: 첨단 무기 도입, 병력 규모 감소 및 군 복무 기간 단축
2009	폴란드	대외적 배경: 냉전 종식, EU와 NATO 가입에 따른 해외 파병 증가 대내적 배경: 군 복무 기간 단축, 징병제에 대한 인식 악화
2010	스웨덴	대외적 배경: 냉전 종식, EU와 NATO의 해외 작전 참여 증가 대내적 배경: 첨단 무기 도입, 군 복무 기간 단축, 국방 예산 감소와 병력 규모 감소
2011	독일	대외적 배경: 냉전 종식, 해외 파병 증가 대내적 배경: 첨단 무기 도입, 군 복무 기간 단축, 징병제에 대한 인식 악화

#### 나. 프랑스: 냉전 종식과 해외 파병 등으로 인한 모병제 도입

프랑스는 2001년, 유럽 국가 중 벨기에, 네덜란드에 이어 3번째로 모병제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전 국민을 징집 대상으로 하는 현대적 징병제를 세계 최초로 실행했던 국가다. 그러나 냉전 종식과 함께 1990년대 중반에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모병제를 도입하자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대규모 병력 유지에 대한 회의론과 모병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92년 12월, 중도우파 정당이었던 공화국 연합(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은 1993년 총선을 앞두고 병역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제안서는 “진정한 직업 군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징병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32)</sup> 이 제안서를 주도한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는 1995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병력 감축과 모병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31) 연도는 모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의회에서 모병제를 채택한 뒤 수 년 뒤에 실제 시행에 들어갔다.

32) “Le RPR propose « vingt réformes pour commencer à changer la France », *Le Monde*, 1992.12.20.

「1997-2002 군 프로그램 관련 1996년 7월 2일 no. 96-589 법(Loi n° 96-589 du 2 juillet 1996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militaire pour les années 1997 à 2002)」을 채택했다. 당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sup>33)</sup>

이에 따라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모병제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공백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했다. 1997년 프랑스 정부는 국방개혁 예산으로 GDP의 약 2.3%에 달하는 1,850억 프랑(약 308억 달러)를 책정했다. 그 중 약 46%를 첨단 무기 등 방위력 개선에 투입해 병력 규모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공백을 미리 보완하기 시작했다.<sup>34)</sup> 그 결과 2001년 모병제로 전환할 당시, 병력이 대폭 감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병제 전환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으며, 프랑스 경제가 호황기였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문제가 없었다.<sup>35)</sup>

더 나아가 군 당국도 모병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1995년 정부는 국방개혁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군 고위직도 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등 군도 국방 개혁에 긍정적이었다.<sup>36)</sup> 실제 전투력 면에서도 모병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사들이 첨단 무기체계를 익히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1991년 걸프전에서는 프랑스 전투력이 영국보다 열세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sup>37)</sup>

여론 역시 모병제 도입에 호의적이었다. 1990년부터 프랑스의 군 정보·여론국(Service d'informations et de relations publiques des armées)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는 응답자의 58%만이 모병제에 찬성했으나, 1991년 74%, 1993년 75%, 1994년 74% 등, 1991년 걸프전쟁을 기점으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sup>38)</sup>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선제적인 대처로 2001년 프랑스는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2020년 기준 프랑스는 204,488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장교급은 33,487명, 부사관급은 91,380명, 병사는 79,621명이다.<sup>39)</sup>

#### 다. 독일: 통일로 인한 모병제 도입 지연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였으나 통일 후 모병제를 도입한 국가로 많은 시사점을 내

33) 문병기, 앞의 글.

34) 홍성표, 「프랑스 국방개혁 교훈을 통해 본 한국군 개혁방향」, 『신아세아』, 제12호 제4권, 2005, pp. 130-131.

35) 임민혁 외,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사례에 대한 동태적 SWOT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6권, 제3호, 2018, p. 45.

36) 위의 글, p. 45.

37) 이태우,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의 연구 : 병역유형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8) Serge Vinçon, *L'avenir du service national, Rapport 349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Défense et des Forces armées*, Sénat, 1995-1996.

39) Ministère des armées, *Les chiffres clés de la défense, édition 2021*, 2021.12.

포하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10년 늦은 2011년 7월 1일에 모병제를 도입했다. 그 배경으로는 동서독 간의 갈등 제거로 인해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이 감소했던 것과, 1990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도출하기 위해 병력 감축을 선제적으로 결정했던 것을 들 수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은 동독의 사실상 붕괴로 대규모 병력을 감축하고자 했다. 1990년 9월,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와 '2+4조약(Zwei-plus-Vier Vertrag)'을 체결해 1990년 10월 통일에 대한 주요국들의 합의를 도출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당시 60만여 명이었던 병력을 1994년 말까지 37만 명으로, 2019년에는 18만5천 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규모 정예 부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0)</sup>

실질적인 모병제는 다른 EU 회원국 보다 늦은 2011년에야 도입되었다.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안보위협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막대한 통일 비용을 부담한 서독이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비용까지 추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더불어 이질적인 구 동서독 출신 군인들이 신속하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더 유리했으며,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독 출신 장병의 수가 너무 많아질 위험도 있었다.<sup>41)</sup>

그러나 국제 질서 변화와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모병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탈냉전에 따른 긴장 완화와 비EU 회원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해외 군사 작전 등이 중요해지면서 최첨단 장비 기술을 보유한 소수 정예 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도 병역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잉여 병력이 발생했다. 1970년대 초부터 병역 기피 현상이 점점 더 악화되자 정부는 군 복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계속 단축시켰다. 1972년에는 18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이 15개월로, 1990년에는 12개월, 1995년에는 10개월, 2001년에는 9개월, 2010년에는 6개월로 줄어들었다. 복무기간 단축 결과, 병사들이 무기 체계를 숙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졌으며 전투력 저하 문제도 심각해졌다.<sup>42)</sup> 또 통일 이후 동서독 군의 통합과 군 병력의 증가로 잉여 병력이 발생하자 군 복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군 복무를 면제 받고<sup>43)</sup> 대체복무제도와 유사한 시민봉사 제도가 군 복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sup>44)</sup> 병역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sup>45)</sup>

결국, 2000년대에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은<sup>46)</sup>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

40) 이승철, 「통일 독일의 군 통합 전략 연구」, 『군사연구』, 제136호, 2013, pp. 65-89.

41) 임민혁 외, 앞의 글, pp. 46-47.

42) 김태산, 「재통일 이후 독일 연방군의 모병제 전환 노력과 그 시사점」, 『군사연구』, 제152집, 2021, pp. 63-87.

43) 이태우, 앞의 글, pp. 78-99.

44) 김재윤, 「왜 모병제인가?」,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 2012, p. 44.

45) 임민혁 외, 앞의 글, p. 46.

화하고 징병제와 관련된 불만이 악화되자 「징병법」을 개정해 징병제 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자발적인 복무자(Freiwilliger Wehrdienst)에 대한 내용이 「징병법」에 추가되고, 군인 봉급, 부양가족, 경력, 휴가 등과 관련된 법들이 차례로 개정되면서 2011년 징병제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징병제가 폐지되지 않았다. 2022년 기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12a조에 따르면 여전히 “남성은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은 사문화되었으나 안보 상황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징병제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2011년, 연방군은 실질적인 모병제 도입에 따라 군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병력 규모를 축소해 향후 18만5천여 명 규모의 군 병력을 유지하고자 했다.<sup>47)</sup> 더불어 기초군사훈련 이후 전역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입식 교육 대신 동기 부여가 강조된 교육 훈련을 고안·실시했다.<sup>48)</sup> 또 지원병에 대한 상담 센터를 운영해 부족한 교육 기회, 장기 복무 탈락, 생계유지 비용 등이 주요 고민거리임을 확인하고 적극 대처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 종료 후 2011년 20%에서 2015년 23.7%로 증가하던 지원병 전역 비율이 2017년 17.9%, 2019년 15.6%로 감소하게 되었다.<sup>49)</sup> 2022년 기준, 독일은 18만4천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1만5천 명이다.<sup>50)</sup>

## 라. 스웨덴: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모병제 도입

스웨덴은 2010년 7월 1일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8년 후인 2018년에 징병제를 재도입한 유일한 북유럽 중립국이다. 1901년부터 징병제를 운용했던 스웨덴은 대규모 병력자원 등 군사력에 기반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특히 냉전 시기 동안 징병제를 통해 확보한 대규모 병력으로 영토 전역을 수호하는 방위 전략을 고수했다. 냉전 초기에 매년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징병되었으며 군 복무 면제자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했던 것은 이러한 안보 전략 때문이었다.<sup>51)</sup>

병역제도 개편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냉전 종식, UN·EU·NATO 등과의 해외 군사 작전 증가, 첨단 무기 도입 등으로 인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적어졌다. 국제 질서의 변

46) 강정수, 「전환기 맞은 독일 징병제」, 『한겨레21』, 2001.4.24.; 최영래, 「독일의 병역제도」, 『병무』, 제54권, 2003, p. 40.

47) Detlef Buch, *Wohin mit der Wehrpflicht?: Weisen die Partner wirklich den richtigen Weg?*, Peter Lang, 2009, p. 69.

48) 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Jahresbericht 2011*, 2012, pp.9-26.

49) 김태산, 앞의 글, p. 75.

50) Global Fire Power, 2022 Germany Military Strength(검색일: 2022.12.13.),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php?country\\_id=germany](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php?country_id=germany)>.

51) Klas Kronberg, LUMPEN 100 ÅR(검색일: 2022.12.20.), <<https://www.forsvarsmakten.se/sv/information-och-fakta/var-historia/artiklar/100-ar-i-lumpen/#:~:text=sina%20tio%20favoriter.-,Klas%20Kronberg%2C%20redakt%C3%B6r%20f%C3%B6r%20boken%20E2%80%9DLumpen%20E2%80%93%20fr%C3%A5n%20m%C3%B6nstring%20till,och%20forskningsprojektet%20i%20Arm%C3%A9museums%20historia.>>. 참고로 1960년 스웨덴 인구는 748만 명이었다.

화에 따라 1995년 스웨덴 정부는 병력 규모 축소 법안을 채택했으며, 군 당국은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군 복무 지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병역제도안을 제시했다.<sup>52)</sup> 2000년대 들어 국방 예산이 축소되고 다수의 군 부대가 폐지된 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징병대상자 중 25%만이 군 복무를 하게 되는 등 군 면제자가 급증해 징병제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sup>53)</sup> 군 복무 기간도 점차 줄어들어 15개월이었던 군 복무 기간이 1990년대 10개월, 2010년 모병제 도입 전에는 7개월로 단축되었다.<sup>54)</sup> 더불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자 2009년 정부는 징병제 폐지를 결정했으며,<sup>55)</sup> 의회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의회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 153표, 반대 150표로 징병제 폐지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모병제 반대파의 가장 큰 우려는 모병제로는 목표로 하는 지원병 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0년 7월, 모병제가 도입된 후 군 복무 희망자 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통해 단체 활동과 협력의 필요성 인식 등을 경험할 수 있다며 자발적인 군 복무를 독려하기도 했다.<sup>56)</sup> 모병제 도입 이후 사회적으로도 군 복무를 자기 계발과 경력 관리 수단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4년 기초군사훈련 대상자가 2013년에 비해 43% 감소하는 등 지원병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sup>57)</sup> 그 배경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징병 대상자 수 감소와 군 복무에 대한 관심 축소를 들 수 있다.<sup>58)</sup>

또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국방 예산의 증가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징병제 운용 당시에도 병력 규모가 크지 않아 모병제 도입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2009년 당시 병력 규모가 23,000명, 국방 예산은 364억 크로나였는데, 모병제로 전환한 다음 해인 2011년에는 병력 규모가 21,000명, 국방 예산은 406억 크로나로 큰 차이가 없었다.<sup>59)</sup>

52) Sanna Strand and Joakim Berndtsson, "Recruiting the "Enterprising Soldier": Military recruitment discourses 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Critical Military Studies*, Vol. 1 No. 3, 2015, p. 232.

53) Peter Nordlund, "Sweden and Swedish Defence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33 No. 4, 2022; Marinmuseum, History of the Swedish military service(검색일: 2022.12.13.), <<https://www.marinmuseum.se/en/whats-on/exhibitions/the-end-of-the-line/history-of-the-swedish-military-service>>.

54) Jonas F. Ludvigsson, Daniel Berglind, Kristina Sundquist, Johan Sundström, Per Tynelius & Martin Neovius, "The Swedish military conscription register: opportunities for its use in medical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37, 2022, pp. 767-777.

55) Government of Sweden, *Regeringens proposition*, 2009.10., p. 160.

56) Sanna Strand and Joakim Berndtsson, 앞의 글.

57) Library of US Congress, Sweden: Mandatory Military Education Re-Introduced(검색일: 2022.12.25.),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7-05-05/sweden-mandatory-military-education-re-introduced/>>.

58) Totalförsvarets rekryteringsmyndighet, årsredovisning för 2014, s. 10.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En robust personalförsörjning av det militära försvaret*, Stockholm 2016, p. 138에서 재인용.

59) IISS, *Military Balance*, 2011.

## 마. 폴란드: NATO와 EU 가입 이후 모병제 도입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모병제를 도입했다. 폴란드의 경우 지형학적으로 친러 성향의 벨라루스와 러시아 해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sup>60)</sup>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NATO와 2004년 EU 가입으로 NATO의 집단방위체제와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이하 CSDP)에 편입된 뒤로는 보다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 폴란드는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코소보, 레바논, 시리아, 차드 등 해외에 3천 명의 군 장병을 파견하는 등 NATO의 해외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로 인해 소규모 정예 부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내적으로는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악화되었다. 징병 대상인 젊은이 중에는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학업 기간을 계속 연장하거나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 폴란드 인터넷 포럼에서는 신체검사에서 D등급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를 자해하는 방법까지 소개하기도 했다.<sup>61)</sup> 반면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모병제가 도입되기 1년 전인 2008년, 폴란드 여론조사 기관인 CBOS는 여론조사 응답자 중 54%가 완전한 직업 군인제에 찬성했으며, 35%만이 징병제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sup>62)</sup> 징병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군 복무 기간도 점차 단축되었다. 1967년 3년에서 2년으로 군 복무 기간이 줄었으며, 1980년대에는 18개월, 12개월, 9개월로 더 짧아졌다.<sup>63)</sup> 또 징병제를 통한 대규모 병력 유지는 공산주의 체제의 유물이라는 인식 확산도 모병제 도입을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sup>64)</sup>

이러한 국내의 상황 변화로 인해 폴란드 정부는 다른 NATO 회원국들처럼 징병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2008년 폴란드 의회가 「일반병역의무법(Act of general military duty)」을 개정해 2009년 1월 9일을 기점으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각에는 모병제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특히 2008년 8월에는 조지아와 러시아 간에 영토 분쟁으로 인한 무력 충돌까지 야기되어 대외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진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60)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의 해외 영토로 북쪽으로는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는 폴란드, 서쪽으로는 발트해에 접해 있으며, 러시아 본토와는 4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부동항이라는 특징 때문에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주둔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군사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칼리닌그라드는 프로이센의 영토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던 1945년 소련에 합병되었다.

61) Gabriela Baczynska, "Poland gears for welcome, costly end to army draft", *Reuters*, 2008.9.10.

62) Daniel Tilles, "Over half of Poles want military service restored but most opposed to loosening gun laws", *Note from Poland*, 2022.8.11.

63) Iwona Szkudlarek, "The Recruitment Requirements – Candidates' Leadership Skills in Voluntary Military Service in Poland", *Obronność*, Vol. 3 No. 27, 2018, p. 197.

64) Gabriela Baczynska, 위의 글.

정부의 징병제 폐지 결정이 너무 성급하고 향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sup>65)</sup> 2009년 모병제가 실시됨에 따라 당시 12만4천 명이었던 병력은 2010년까지 12만 명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는데, 2022년 기준 약 14만 명의 병력이 유지되고 있다.

병력 규모 등 단순 수치상으로는 폴란드의 모병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IBP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응답자의 39%만이 징병제 재도입에 찬성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여론 조사에서는 과반수가 조금 넘는 수가 징병제 재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sup>66)</sup>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2023년 28,580명의 지원자와 38,000명의 예비군 등 20만 명을 대상으로 최장 90일 간의 군사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sup>67)</sup> 또 폴란드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늘려 훈련병에게도 982유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유급 모병제(Paid Voluntary Service) 제도를 통해 현재 14만 3,500명 규모의 병력을 30만 명까지, 2배로 증강하는 방안 논의 중이다.<sup>68)</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폴란드의 모병제 도입 결정에는 냉전 종식과 해외 파병 증가로 인한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 감소, 첨단 무기 도입, 군 복무 기간 단축 등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 군 복무 회피 경향이 나타나는 등 국가별로 대내외 환경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유럽의 징병제 재전환 사례

### 가. 개괄

2010년대 들어 러시아가 조지아, 우크라이나와 충돌하자 주변 국가들의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외에도 인구와 국방력 면에서 규모가 작고 반러 경향이 강한 발트 3국의 경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확보함으로써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가 증가했다.

가장 먼저 징병제를 재도입한 곳은 우크라이나로 2014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병역제도를 전환했다. 이어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던 리투아니아는 2015년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조지아는 모병제로 전환한 지 7개월만인 2017년에,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은 2018년에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마지막으로 라트비아는 2023년에 징병제를 다시 운용할 계획이다.

65) Gabriela Baczynska, 위의 글.

66) Daniel Tilles, 위의 글.

67) "Poland plans to draft 200,000 for military training next year", *The First News*, 2022.12.6.

68) Ben Koschalka, "Poland launches paid voluntary military service", *Notes from Poland*, 2022.5.18.

징병제를 재도입한 국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나 거리가 가까운 인접국이라는 점, 또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위협을 심각하게 보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징병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시민이 많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이나 리투아니아의 경우 모병제 도입 후 목표로 하는 병력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병제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했다.

| 표 2 | 2010년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징병제 재전환 배경

년도	국가	비고
2014	우크라이나	대외적 배경: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안보 상황 악화 대내적 배경: 모병제 전환 이후 병력 모집 난항
2015	리투아니아	대외적 배경: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안보 상황 악화 대내적 배경: 모병제 전환 이후 병력 모집 난항
2018	스웨덴	대외적 배경: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안보 상황 악화 대내적 배경: 모병제를 통한 병력 모집 난항
2023	라트비아	대외적 배경: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상황 악화

#### 나. 우크라이나: 2014년 러시아 침공 직후 징병제 재도입

우크라이나는 2013년 10월 모병제 전환을 결정했다가, 2014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강제로 할양당한 직후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즉 러시아 침공 직전에 모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것은 러시아 침공을 예상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2013년까지만 해도 국내외 안보 상황이 양호했던 이유도 있다.

냉전 종식 후 우크라이나는 EU와 NATO의 안보 체제에 편입되어 안정된 안보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NATO 가입을 희망하던 우크라이나는 NATO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그 결과 2008년 NATO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또 1990년대 중반부터 NATO 회원국들이 차례로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우크라이나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병역제도를 개편하고자 했다.

모병제 전환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병력 규모를 축소해왔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78만 명이었던 병력은 2001년 4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2012년에는 18만4천 명으로 줄었다.<sup>69)</sup>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18년까지 병력 규모를 7만 명으로 더 축소할 계획이었다.<sup>70)</sup>

69) 1991년 기준 우크라이나 인구는 5,200만 명이었다.

그러나 병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제고는 병행되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NATO 가입을 추진하면서 군 병력을 합동신속대응부대(Joint Rapid Reaction Forces, 이하 JRRF)와 예비군 성격의 주방위부대(Main Defense Forces)로 이원화해 JRRF를 언제든지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으로 구성하고자 했다.<sup>71)</sup> 하지만 JRRF의 병력 충원율이 70%밖에 되지 않았으며, 100% 충원된다 해도 JRRF의 총 병력 규모가 2만4천 명밖에 되지 않아 인구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았다.<sup>72)</sup> 2008년 재정위기도 우크라이나 국방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 장비 일부를 해외에 매각해야 했으며, 한동안 대대 단위 이상의 군사 훈련도 실행할 수가 없었다.<sup>73)</sup>

2014년 8월, 모병제를 도입한 지 1년만에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2014년 초에 있었던 러시아 침공 탓이 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지방의 친러 반군을 소탕하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의 침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매각하려고 내놓았던 군 장비를 다시 군에 귀속시켰으며, 2018년 우크라이나군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했다. 또 직업 군인의 비중도 확대해 전문성과 기술력도 보완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22년 2월 기준, 우크라이나는 6만 명의 직업군인을 포함해 총 2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sup>74)</sup>

#### 다. 리투아니아: 러시아 안보위협 가중으로 징병제 재도입

리투아니아는 2008년에 모병제를 도입한지 7년만에 징병제로 다시 전환했다. 2015년 초, 달리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ė)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트3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어 징병제 재도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sup>75)</sup>

이와 같이 리투아니아가 징병제를 재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안보위협 때문이었다.<sup>76)</sup> 2014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등에 거주하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3국은 반러시아 정서가 강한 국가들이지만, 인구가 적고 국방력이 약한데다가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 사용자 비중도 높아 발트3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

70) "Ukraine To En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2013", *Radio Free Europe*, 2012.12.30.

71) Ministry of Defence of Ukraine, *White Book 2015. The Armed Forces of Ukraine*, Kyiv: 2016.

72) 방종관, 「30년 전 유럽 최강이었는데…우크라 군 몰락이 한국에 준 교훈」, 『중앙일보』, 2022.2.23.

73) 위의 글.

74) 방종관, 앞의 글.

75) 임성우, 「리투아니아, 군사력 증강을 위해 징병제 부활」, KIEP, 주간이슈분석, 2016.5.

76) Ben Knight, "German military hit by damning report", *DWI*, 2019.1.29.

려가 있었다.

리투아니아의 이러한 우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해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본토와도 멀지 않다. 더구나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군이 핵 공격 모의 훈련 등 여러 종류의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sup>77)</sup> 2014년 12월에도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에서 9천 명의 군인과 55척 이상의 군함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행한 바 있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인구와 병력이 적은 소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쉽지 않다. 2004년 NATO에 가입해 미국 등 다른 회원국의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 방위체제에 속하게 되었지만 모병제 도입 이후 지원병 수가 많지 않아 자체 병력 규모가 너무 적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병제를 운용하는 동안 목표치에 1/3 정도만 충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4년 기준 군 병력 규모가 5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sup>78)</sup> 리투아니아 병력 규모가 1만5천여 명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징병제 재도입을 한 2016년 이후부터였다.

이러한 대내외 안보 상황으로 인해 리투아니아에서는 징병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 리투아니아 미디어 전문가는 최근 여론 결과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징병제 도입에 찬성했는데, 이는 러시아 침공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즉, 러시아라는 안보위협이 가중되면서 국민들 대부분이 징병제 재도입에 찬성하게 된 것이다.<sup>79)</sup>

징병제를 재도입한 후 리투아니아는 목표 충원 병력 규모를 연간 4천 명으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18세에서 23세 사이의 성인 남성들이 9개월간 군 복무를 하고 있다.<sup>80)</sup> 그런데 연간 충원 목표인 4천 명은 징병 대상자 수보다 적어 군 복무 면제자 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리투아니아 정부는 「군징병법(Law on Military Conscription)」에 따라 매년 징집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 선별 시스템을 이용해 징집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대표들이 징병 대상자 목록 작성과 관리를 매년 감사하는 등 징집 대상자 선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81)</sup>

77) "Lithuania to reintroduce conscription over security concerns", *BBC*, 2015.2.24.

78) Gerda Jakštaitė and Giedrius Česnakas, Lithuania's reintroduction of conscription is a clear response to the threat posed by Russia in the Baltics(검색일: 2022.12.25.), <<https://blogs.lse.ac.uk/europpblog/2015/03/09/lithuanias-reintroduction-of-conscription-is-a-clear-response-to-the-threat-posed-by-russia-in-the-baltics/>>.

79) Ben Knight, 앞의 글.

80) Karys, Conscripts(검색일: 2022.12.5.), <<https://www.karys.lt/en/military-service/conscript-service/conscrip/400#:~:text=Some%20up%20to%204%2C000%20Lithuanian,service%20on%20a%20voluntary%20basis.>>.

81) Karys, Conscripts(검색일: 2022.12.5.), <<https://www.karys.lt/en/military-service/conscript-service/conscrip/400#:~:text=Some%20up%20to%204%2C000%20Lithuanian,service%20on%20a%20voluntary%20basis.>>.

## 라. 스웨덴: 러시아 안보위협 가중으로 징병제 재도입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를 도입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국방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징병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확대에 촉매제가 된 사건으로 2014년 10월 국적 미상의 잠수함이 스웨덴 연안인 스톡홀름 군도 쪽에서 러시아로 재난 신호를 보낸 것을 들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 잠수함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잠수함이 러시아로 신호를 보냈으며, 신호 발신지가 스웨덴과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의 해군 기지와 인접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측 잠수함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 1960년대 3차례, 1970년대 2차례, 1980년대에 12차례 등 냉전 당시에도 스웨덴 인근 해역에 신원 불명의 잠수함이 출몰했던 사건과 연관되면서 스웨덴은 물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국가 등 여러 국가들도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다.<sup>82)</sup>

이에 따라 스웨덴은 대외적으로는 NATO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징병제의 재도입을 추진하고자 했다. 단,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NATO에 가입하는 대신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2014년 8월, 「NATO 호스트국가 협정(Host Country Agreement with NATO)」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이를 발효시켰다. 이로써 NATO 병력이 스웨덴 영토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NATO 회원국 병력이 스웨덴 방위를 위하여 스웨덴 영토 내에서 작전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sup>83)</sup>

대내적으로는 2010년도에 도입한 모병제가 계획처럼 잘 운용되지 않았던 점도 징병제 재도입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10년 당시 모병제를 통해 매년 5,300명을 모집하고자 했으나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해, 2014년까지 4년 동안 총 16,000명의 병사를 모집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sup>84)</sup> 여론 조사에서도 징병제 재도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016년 여론기관 Ipsos가 실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징병제 재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징병제를 통한 군사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많아졌다.<sup>85)</sup>

이러한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2017년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징병제를 다시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4천 명에서 6천 명의 병력

82) Karl Ritter and Matti Huuhtanen, "Sweden's search for unidentified sub causes concern around Baltic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4.10.20.

83) Charles Duxbury, "Sweden Ratifies NATO Cooperation Agreement", *The Wall Street Journal*, 2016.5.25.

84)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1만 6000명 모집 가능성 낮아 "여성도 모집?"」, 『서울신문』, 2014.10.31.

85) "Majority of Swedes back return to military service", *The Local*, 2016.1.4.

을 징병제로 충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매년 8천 명으로 충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병제를 운용할 때와 달리, 매년 8천 명이라는 충원 목표는 징집 대상자의 9% 정도에 불과하며, 또 여성 징병제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 충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스웨덴의 병력은 1만6천 명이며 향후 병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sup>86)</sup>

#### 마. 라트비아: 2023년부터 징병제 재도입

2007년 모병제를 도입했던 라트비아는 2022년 7월 징병제 재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라트비아가 징병제를 재도입한 것은 2022년 7월, 아르티스 파브릭스(Artis Pabriks)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것과 같이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라트비아 등 발트3국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트3국 내에는 향후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발트3국의 우려는 2022년 8월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이 라트비아를 방문해 NATO 동맹국으로서 향후 더 많은 합동 군사 훈련을 실행하고, 필요할 경우 미군 병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공언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sup>87)</sup>

라트비아 국방부는 2023년 1월부터 5년 간 18-27세 남성을 대상으로 총 5만 명의 병력을 징집할 예정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2023년에는 1천 명을 징병할 계획이다. 징병 대상자들은 국가 방위대, 국가 경호대, 대학의 지휘관 과정 이수, 내무부에서 대체복무 등의 4가지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예정이다. 의무 복무 기간은 12개월로 처음 3개월은 기초 군사훈련, 그 후 3개월은 특기 교육, 나머지 기간은 자대에 배치된 후 군사 훈련을 받게 된다.<sup>88)</sup>

라트비아의 징병제 재도입으로 인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던 에스토니아, 2015년 징병제를 재도입한 리투아니아에 이어 발트3국이 모두 징병제를 운용하게 되었다. 모병제가 운용되는 마지막 해인 2022년 기준, 라트비아의 병력 규모는 6,500명이며, 참고로 라트비아의 인구는 188만 명이다.<sup>89)</sup>

86) Global Fire Power, 2022 Sweden Military Strength(검색일: 2022.12.13.),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php?country\\_id=sweden](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php?country_id=sweden)>.

87) 송지유, 「우크라 다음은 우리」 발트3국 벌벌 떨자…美 "미군 추가배치", 『머니 투데이』, 2022.8.11.

88) Ministry of Defence, Ministry of Defence begins to work on gradual introduction of State Defence Service(검색일: 2022.12.16.), <<https://www.mod.gov.lv/en/news/ministry-defence-begins-work-gradual-introduction-state-defence-service#:~:text=A%20citizen%20of%20Latvia%20will,recruits%20will%20be%20socially%20protected.>>.

89) Global Fire Power, 2022 Latvia Military Strength(검색일: 2022.12.16.),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php?country\\_id=latvia](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php?country_id=latvia)>.

### 3. 유럽의 징병제 재도입 논의 국가

#### 가. 개괄

상기한 바와 같이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모병제를 도입했으나, 2010년대 들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러시아 인접국들을 중심으로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들도 있다. 2014년 이후 독일과 크로아티아, 2017년부터 불가리아, 프랑스에서 제기된 논의들이 그러한 예이다.

징병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 중인 국가에는 러시아의 안보위협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도 있으나, 상이한 면도 있다. 독일과 불가리아의 경우 모병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르비아와의 국경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규모를 증원할 필요가 있었다. 프랑스는 2010년대 중반 연쇄 테러 사건 이후 이민 2세대 젊은이들의 정체성과 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하여 1개월의 단기 군 복무와 유사한 SNU를 실시하고 있다.

표 3 | 2010년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징병제 재도입 논의 배경

년도	국가	비고
2014년 이후	독일	재도입 논의 배경: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
2017년 이후	프랑스	재도입 논의 배경: 마크롱 대통령의 징병제 공약.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테러 대처 방법의 일환

#### 나. 독일: 모병제를 통한 병력 충원 어려움

최근 독일에서 징병제 재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 징병제를 이미 재도입한 국가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의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시작되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징병제 재도입 논의로는 2022년 3월, 독일 연방하원의 징병제 재도입 토론을 들 수 있다.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사민

당의 볼프강 헬미히(Wolfgang Hellmich) 의원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sup>90)</sup> 중도우파 정당인 기독교민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이하 기민당)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의원들도 징병제 재도입이 러시아와 같은 적국을 “군사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 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이하 기사연)의 플로리안 한(Florian Hahn) 전 기사연 의원은 병력 규모 증강 보다는 기술과 무기 체계 개혁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거리를 두는 등 정치권에서도 징병제 논의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sup>91)</sup> 일례로 2022년 6월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이 “더 강한 사회적 단합”을 위하여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연방가족부 장관 등이 반대해 실행되지 못했다.<sup>92)</sup>

유럽 국가들의 징병제 재도입은 군비 증강의 일환으로 해석되어 인접국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 세계대전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등은 독일의 군비 증강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독일의 징병제 재도입 논의에 대해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에 징병제 유령을 불러왔다”고 견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93)</sup>

대내적인 이유로는 모병제 도입 이후 병력 총원 수준이 기대보다 낮았던 것을 들 수 있다.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203,000명의 병력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2019년 병력은 181,000명, 2022년 5월에도 184,000명에 불과했다.<sup>94)</sup> 또 매년 새롭게 충원되는 병력은 2017년 23,000명, 2018년에는 2만 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충원 병력 중 일부는 계약이 종료되는 군인들이 재계약한 경우로 실질적인 충원 병력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독일 군의 평균 연령이 점차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sup>95)</sup>

#### 다. 프랑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단기 군 복무 실행

프랑스의 징병제 재도입 논의는 테러 예방 목적이 크다. 2015년 11월, 파리와 근교에 위치한 프랑스 스포츠 스타디움, 바타클랑 콘서트 홀 등 7군데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가 발생해 13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에도 이슬람 극단주

90) William Nehra, “German MPs debate reintroduc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 AM EXPAT*, 2022.3.6.,

91) “Ukraine war raises spectre of conscription in Germany”, *France24*, 2022.3.1.

92) “German president calls for debate on compulsory social service”, *The Local*, 2022.6.12.

93) *France24*, 앞의 글.

94) Deutscher Bundestag, Military recruitment in Germany(검색일: 2022.12.16.),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905814/affa40fa0ccbd5e949133b608638b86d/WD-2-038-22\\_EN-pdf-data.pdf](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905814/affa40fa0ccbd5e949133b608638b86d/WD-2-038-22_EN-pdf-data.pdf)>.

95) Ben Knight, 앞의 글.

의자에 의한 트럭 테러가 발생해 86명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테러리스트들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이민자였음이 밝혀지면서 이민자들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통합과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등이 대처방안으로 모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경제적 박탈감과 정체성 혼란을 예방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논의되었다. 그 일환으로 징병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기제로 인식되었다. 징병제 재도입을 주도한 것은 2017년 4월 대선 후보로 나왔던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었다. 2017년 3월, 마크롱 대통령 후보는 18세부터 21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1개월 군사 훈련을 받는 단기 군 복무를 제안했다. 목적은 국방력 제고와 함께 이민자들의 사회적 혼합(mixité sociale)과 공화국의 단합(cohésion républicaine) 등을 통해 프랑스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96)</sup> 더불어 단기 군 복무에서 쌓은 경험이 일자리를 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sup>97)</sup>

마크롱 대통령은 SNU 제도를 2019년부터 15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 뒤, 2021년에 정식 시행하기 시작했다. 원안은 의무 단기 징병제였으나 일부의 반대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에 응하는 젊은이들만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1년 총 14,650명이 SNU 훈련을 받았으며, 이 중 56%는 여성, 44%는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SNU를 주관하는 기관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SNU에 지원한 첫 번째 동기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으며, '스포츠 등 신체 활동을 위해서'와 '군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력서에 다양한 경험을 적고 싶어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단체 생활 경험, 새로운 기술 습득, 봉사 경험 등의 이유가 있었다.<sup>98)</sup>

엄격히 말해 SNU 제도는 군 복무와는 차이가 있다. 군 복무로 보기에는 연령이 너무 낮다는 점,<sup>99)</sup>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된다는 점, 2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군 훈련이라기 보다는 여름 캠프와 유사하다는 점<sup>100)</sup> 등 때문에 단기 징병제와는 거리가 있다. SNU 제도를 국방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도 이러한 면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러한 SNU가 단기 징병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12월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인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SNU를 모든 젊은이에 대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2023년 초에 SNU를 모든 젊은이들에

96) Grégoire Poussiégué, "Emmanuel Macron veut rétablir un service militaire obligatoire d'un mois", *Les Echos*, 2017.3.18.

97) "Emmanuel Macron propose le rétablissement d'un « service national » d'un mois obligatoire", *Le Monde*, 2017.3.18.

98) INJEP, *Déploiement du Service national universel sur l'ensemble du territoire français en 2021*, Rapport d'étude, 2022.1.

99) République française, Service national universel, Vivez l'aventure SNU(검색일: 2022.12.16.), <<https://www.snu.gouv.fr/>>.

100) Jean-Michel Bocquet, "Le service national universel ne favorisera pas la mixité", *Slate*, 2019.6.18.

게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sup>101)</sup> 만약 SNU가 의무화될 경우 주무 부처와 프로그램 변경 등을 통해 단기 징병제처럼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sup>102)</sup> 독일이나 프랑스 중 한 국가가 징병제를 재도입할 경우 서유럽에 징병제 재도입이 확산될 확률도 배제하기 어렵다.

## IV. 시사점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이 분명해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도출은 시기상조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징병제를 폐지했던 경험과 모병제 운용에 한계가 있어 다시 징병제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들의 선례는 우리나라에 적절한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20여 개 국가들이 모병제를 도입했으며, 2010년대에는 다시 5개 국가들이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병역제도 개편은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90년대 여러 유럽 국가들이 모병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냉전 종식과 소련 와해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모병제 도입이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유럽 국가부터 시작된 것도 지정학적 영향이 크다. 동유럽에서도 러시아와 직접 인접해있지 않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키아 등이 2003년부터 먼저 모병제를 도입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라트비아 등은 2007년에 이르러서야 모병제를 도입한 것도 국제 안보 질서와 병역제도 간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둘째, NATO 가입으로 인한 안보 상황 개선, 군사 작전의 유형 변화, 최첨단 무기 개발 등으로 인해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1990년대 들어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도 유럽 외 지역의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 작전이 빈번해지면서 소규모 정예 부대를 육성해야 했다. 일례로 유럽 국가들은 EU의 CSDP 일환으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 작전과 NATO의 아프가니스탄, 터키, 리비아 작전에 참가하면서 최첨단 기술에 능숙한 병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더불어 1999년 체키아를 필두로 동유럽 국가들이 NATO의 집단방위체

101) "Service national universel : Emmanuel Macron réfléchit à le rendre obligatoire pour tous les jeunes", *La Dépêche*, 2022.12.8.

102) Laurent Lagneau, "Le retour du service militaire fait de nouveau débat en Allemagne", *OPEX360*, 2022.3.1.

제에 편입되면서 유럽의 안보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것도 모병제 도입에 기여했다. 즉 동유럽 국가들이 NATO 가입으로 안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셋째, 병역제도 개편은 정부와 군 당국, 시민 등의 합의를 선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시민들은 모병제 도입을 희망했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동독 군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 바 있다. 결국 독일은 동독과 서독의 정치·사회·경제적 통합이 자리를 잡은 후인 2011년에 EU 회원국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의 경우에도 정부 등의 정치권, 군 당국, 시민 등이 모병제 도입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에 모병제를 도입한 바 있다.

넷째,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병력 충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근 징병제를 재도입한 국가들 중 모병제로 전환한 뒤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 2014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던 우크라이나는 모병제 전환 이후 목표로 하는 병력의 70%밖에 충원되지 않아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리투아니아 역시 모병제를 통한 병력 모집이 목표치에 미달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으며, 스웨덴과 독일 역시 지원자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네덜란드도 2022년 기준 병력 충원 목표치의 25%인 약 9천 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sup>103)</sup> 이탈리아<sup>104)</sup>, 프랑스<sup>105)</sup>도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추가 예산 산정과 재원 마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병사들의 월급 인상과 숙련 기술 보유자 충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예산을 정밀하게 산정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스웨덴은 모병제 전환 전부터 장기적으로 병력 규모와 구조를 개편해 모병제 전환 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대비했다. 또 크로아티아 등은 징병제를 재도입할 경우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즉 국가에 따라 모병제 전환 시 투입되는 예산 규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병력 규모와 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하는 등 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병역제도 개편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103) "Military conscription under consideration in the Netherlands: Report", *NL Times*, 2022.4.8.

104) Nick Squires, "Italian army struggles to find enough recruits as cosseted millennials find military life too tough", *The Telegraph*, 2019.5.16.

105) Laurent Lagneau, "Hausse des départs et difficultés de recrutement : les effectifs du ministère des Armées ont baissé en 2021", *OPEX360*, 2022.5.7.

## V. 나가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모병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병역제도는 한 국가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각 국가의 안보, 경제, 사회적 요인도 병역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역제도와 관련해 논의할 경우 여러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냉전 종식, EU 및 NATO 가입 증가, 해외 파병 증가, 최첨단 무기 도입 등으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지고 독일, 폴란드 등과 같이 징병제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등 대내외 변화가 발생하자 벨기에,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부터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까지 모병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반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국제 질서가 악화되고, 일부 국가에서 모병제를 통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등이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이다. 즉 국내외 안보 상황 등에 따라 병역제도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병제 논의는 주로 인구 감소를 계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럽의 사례와 차이점이 있지만, 최첨단 기술 발전, 징병제에 대한 인식 악화, 안보 상황 등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사례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상기한 유럽의 사례를 비추어 우리나라는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국제적·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 상황을 남북한 관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간 안보 상황이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한반도 상황 외에도 미중 전략경쟁, 일본의 대외 전략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영향력 변화 등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보다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외 파병 증가, 국제 안보 협력 등으로 인한 소규모 정예 부대의 육성 필요성, 혹은 첨단 무기 개발로 인한 고속련 기술자의 중요성 확대 등으로 대규모 병력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국가 간 무력 충돌 시에는 대규모 병력 유지가 영토 수호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안보 상황 및 군사 작전 전략을 살펴보고

어떠한 병역제도가 더 적절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병제 도입에 대해 논의할 경우,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동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병역제도는 국방력은 물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데다가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이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에도 모병제 도입에 대해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장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모병제 전환을 논의할 경우 모병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 예상과 달리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유럽 등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유럽의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발생할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병역제도 개편 시 예산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리 예상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및 학자들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 시 병사 규모와 구조 등에 따라 수 조 원에서 수십 조 원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06)</sup> 따라서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병력 규모와 구조 등을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06) 백상경, “與-정부가 띄운 ‘모병제’…전환하려면 5년간 13조3000억원 든다”, 『매일경제』, 2020.8.6.; 이동환, 강원석,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 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7.

## 참고문헌

- ////////////////////////////////////
- \* 「세상 바꾸려 대통령 후보 나섰다. ‘20억 기탁금’ 목숨 걸고 싸울터」, 『OhmyNews』, 2002.9.9.
  - \* 「권영길 후보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SBS, 2007.10.1.
  - \* 「김두관 “모병제 도입해 군인 절반 감축”」, 『한겨레』, 2012.8.19.
  - \*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경제적”」, 『세계일보』, 2005.7.5.
  - \* 「스웨덴 징병제 부활 추진, 1만 6000명 모집 가능성 낮아 “여성도 모집?”」, 『서울신문』, 2014.10.31.
  - \* “유승민 “모병제, 빈곤 청년만 군대 가게 될 것”」, 연합뉴스, 2017.2.22.
  - \* 「이명박 “모병제 도입 검토할 필요”」, 『동아일보』, 2007.9.13.
  - \* “정동영 “평화프로세스 작동시 모병제 가능”」, SBS, 2007.11.20.
  - \* “Emmanuel Macron propose le rétablissement d’un « service national » d’un mois obligatoire”, *Le Monde*, 2017.3.18.
  - \* “German president calls for debate on compulsory social service”, *The Local*, 2022.6.12.
  - \* “Le RPR propose « vingt réformes pour commencer à changer la France”», *Le Monde*, 1992.12.20.
  - \* “Lithuania to reintroduce conscription over security concerns”, [BBC](#), 2015.2.24.
  - \* “Majority of Swedes back return to military service”, *The Local*, 2016.1.4.
  - “Military conscription under consideration in the Netherlands: Report”, *NL Times*, 2022.4.8.
  - \* “Poland plans to draft 200,000 for military training next year”, *The First News*, 2022.12.6.
  - \* “Service national universel : Emmanuel Macron réfléchit à le rendre obligatoire pour tous les jeunes”, *La Dépêche*, 2022.12.8.
  - \* “Ukraine To En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2013”, *Radio Free Europe*, 2012.12.30.
  - \* “Ukraine war raises spectre of conscription in Germany”, *France24*, 2022.3.1.
  - \* 강정수, 「전환기 맞은 독일 징병제」, 『한겨레21』, 2001.4.24.
  - \* 김대일,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경제학연구』, 제68권 제3호, 2020, pp. 139-179.
  - \* 김동현, “尹 “징병·모병 혼합제”…沈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연합뉴스,

2022.2.25.

- \* 김민호,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연구 -대만 모병제 전환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권 제1호, 2021, pp. 883-898.
- \* 김재윤, 「왜 모병제인가?」,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 2012.
- \* 김태산, 「재통일 이후 독일 연방군의 모병제 전환 노력과 그 시사점」, 『군사연구』, 제152집, 2021, pp. 63-87.
- \* 문병기, 『프랑스 안보정책의 특성과 변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 박병수, 이경미, 엄지원, 이세영, 「문재인부터 남경필까지…한 눈에 속 들어오는 ‘군·병역 공약’」, 『한겨레』, 2017.1.25.
- \* 박진수,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쟁점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5권 제3호, 2022, pp. 237-270.
- \* 박휘락, 「[박휘락의 안보백신] 선(先) 북핵대응 후(後) 모병제 제안하라」, 『데일리안』, 2021.4.27.
- \* 방종관, 「30년 전 유럽 최강이었는데…우크라 군 몰락이 한국에 준 교훈」, 『중앙일보』, 2022.2.23.
- \* 백상경, 「與·정부가 띄운 ‘모병제’…전환하려면 5년간 13조3000억 원 든다」, 『매일경제』, 2020.8.6.; 이동환, 강원석,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 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7.
- \* 송지유, 「우크라 다음은 우리」 발트3국 벌벌 떨자…美 “미군 추가배치”」, 『머니투데이』, 2022.8.11.
- \* 양성모, ““인구감소..모병제 피할 수 없어” vs “충원 불가..병력 구조 개편부터”」, KBS, 2021.6.7.
- \* 이승철, 「통일 독일의 군 통합 전략 연구」, 『군사연구』, 제136호, 2013, pp. 65-89.
- \* 이용민,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정책브리핑』, 2019.11.7.
- \* 이종윤, 「‘모병제 도입’ 긍정적인 이재명·홍준표.. 전문가들은 “월급 줄 예산부터 따져봐야” [이슈 진단]」, 『파이낸셜뉴스』, 2021.11.3.
- \* 이태우,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의 연구 : 병역유형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 이학수, ““징병과 모병 사이’..‘병역 개편’ 공약 살펴보니”」, MBC, 2022.2.18.
- \* 이해리, 「[소통광장-병역제도]④ 진호영 “모병제 지금부터 추진해야 10년 후 정착”」, 『뉴스포스트』, 2021.7.6.
- \* 임민혁 외,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사례에 대한 동태적 SWOT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6권, 제3호, 2018,

pp. 31-70.

- \* 임성우, 「리투아니아, 군사력 증강을 위해 징병제 부활」, KIEP, 주간이슈분석, 2016.5.
- \* 조윤영,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징집병 15만명으로 축소”」, 『한겨레』, 2021.12.24.
- \* 정의당, 「노동이 당연한 나라」,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정책공약집, 2017.4.15.
- \* \_\_\_\_\_,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국방공약 발표 기자회견, 2017.3.27.
- \* 정혜인,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 제63권 제4호, 2014, pp. 78-110.
- \* 최영래, 「독일의 병역제도」, 『병무』, 제54권, 2003.
- \* 최창현, 이광석, 전상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분석: 정책논변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4권 제1호, 2015, pp. 93-123.
- \* 홍규빈, “‘병역제도 개편방향 시민사회안’ 발표…“군병력은 30만명으로 감축”», 연합뉴스, 2021.11.10.
- \* \_\_\_\_\_, “군인권센터 “징병·모병 혼합하고 여성 지원도 받아야”», 연합뉴스, 2021.11.10.
- \* 홍성표, 「프랑스 국방개혁 교훈을 통해 본 한국군 개혁방향」, 『신아세아』, 제12호 제4권, 2005, pp. 130-131.
- \* 홍인택, 「‘초봉 300만원 모병제’ 꺼낸 심상정 “남녀, 피부색, 성적지향 차별 없다”」, 『한국일보』, 2021.11.15.
- \* Baczynska, Gabriela, “Poland gears for welcome, costly end to army draft”, Reuters, 2008.9.10.
- \* Bocquet, Jean-Michel, “Le service national universel ne favorisera pas la mixité”, *Slate*, 2019.6.18.
- \* Detlef Buch, *Wohin mit der Wehrpflicht? : Weisen die Partner wirklich den richtigen Weg?*, Peter Lang, 2009.
- \* Duxbury, Charles, “Sweden Ratifies NATO Cooperation Agreement”, *The Wall Street Journal*, 2016.5.25.
- \* Government of Sweden, *Regeringens proposition*, 2009.10.
- \* IISS, *Military Balance*, 2011.
- \* INJEP, *Déploiement du Service national universel sur l’ensemble du territoire français en 2021*, Rapport d’étude, 2022.1.
- \* Knight, Ben, “German military hit by damning report”, DW, 2019.1.29.
- \* Koschalka, Ben, “Poland launches paid voluntary military service”, *Notes from Poland*, 2022.5.18.

- \* \_\_\_\_\_, “Hausse des départs et difficultés de recrutement : les effectifs du ministère des Armées ont baissé en 2021”, *OPEX360*, 2022.5.7.
- \* Lagneau, Laurent, “Le retour du service militaire fait de nouveau débat en Allemagne”, *OPEX360*, 2022.3.1.
- \* Ministère des armées, *Les chiffres clés de la défense, édition 2021*, 2021.12.
- \* Ministry of Defence of Ukraine, *White Book 2015. The Armed Forces of Ukraine*, Kyiv: 2016.
- \* Ludvigsson, Jonas F. *et. etc.*, “The Swedish military conscription register: opportunities for its use in medical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37, 2022, pp. 767–777.
- \* Nehra, William, “German MPs debate reintroduc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 AM EXPAT*, 2022.3.6.
- \* Poussiègue, Grégoire, “Emmanuel Macron veut rétablir un service militaire obligatoire d’un mois”, *Les Echos*, 2017.3.18.
- \* Ritter, Karl and Huuhtanen, Matti, “Sweden’s search for unidentified sub causes concern around Baltic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4.10.20.
- \* Squires, Nick, “Italian army struggles to find enough recruits as cosseted millennials find military life too tough”, *The Telegraph*, 2019.5.16.
- \* Strand, Sanna and Berndtsson, Joakim, “Recruiting the “Enterprising Soldier”: Military recruitment discourses 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Critical Military Studies*, Vol. 1 No. 3, 2015, pp. 233–248.
- \* Szkudlarek, Iwona, “The Recruitment Requirements – Candidates’ Leadership Skills in Voluntary Military Service in Poland”, *Obronność*, Vol. 3 No. 27, 2018, pp. 196–204.
- \* Tilles, Daniel, “Over half of Poles want military service restored but most opposed to loosening gun laws”, Note from Poland, 2022.8.11.
- \* Vinçon, Serge, *L’avenir du service national, Rapport 349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Défense et des Forces armées*, Sénat, 1995–1996.
- \* Wehrbeauftragte des Deutschen Bundestages, *Jahresbericht 2011*, 2012.

## R E P O R T · L I S T

##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76호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2.12.29.	경선주
제275호	국회 의사절차 개혁과 입법기간의 변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 비교	2022.12.29.	전진영
제274호	에너지 안보 ·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과제 - 에너지 정책 방향 검토와 에너지 산업 전망을 중심으로	2022.12.29.	이승만
제273호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2022.12.29.	박소현
제272호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2022.12.29.	이소영
제271호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2022.12.28.	유재국
제270호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2022.12.27.	김형진
제269호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22.12.20.	임준배
제268호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2022.12.20.	배재현 이승림
제267호	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 사례와 시사점	2022.12.15.	김선화
제266호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하와이주(洲) 사례를 중심으로	2022.12.12.	박명희
제265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2022.11.28.	이덕난 유지연
제264호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2022.11.7.	윤성원
제263호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 국제공동연구 감소와 국제협력 총괄 규범 문제를 중심으로	2022.10.20.	권성훈
제262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2022.10.4.	김지민 배성희
제261호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2022.9.16.	배재현 김진수
제260호	자사고와 외고 · 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2022.8.30.	이덕난



**NARS** 현안분석 제277호

#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614-14  
ISSN 2586-565X

